

##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제고

김법현\* · 박용우\*\*

### • 요 약 •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통한 공세적인 핵 독트린과 전술핵무기 증가 및 대규모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핵위협은 증가되고 핵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전략인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신설과 첨단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등 핵 자산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더욱 향상된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한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분석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를 기초로 억제 성공 요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능력 면에서는 전략핵잠수함을 기반으로 해상기반 핵 공유체계와 한국의 핵 방호(Protection)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의지전달 면은 핵협의그룹과 핵전문가의 상설 운용으로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신뢰성 면에서는 정부의 핵억제 정책과 비핵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되었다.

주제어 : 확장억제전략, 워싱턴 선언, 능력, 의지전달, 신뢰성

## I. 서론

최근 들어 북한의 핵위협은 ‘핵무력정책법’, 전술핵무기 수 증가, 대규모 미사일 발사 등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핵사용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북한은 2022년 9월 8일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공포하였다. 이는 핵무기를 억제전력으로만 두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세적인 핵 독트린으로 한미에 대한 강력

\*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제1저자

\*\*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 제2저자

한 위협이었다. 또한 2022년 11월 2일 한미 비질런트 스톱 훈련에 대한 반발을 빌미로 대규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날 북한은 총 4차례에 걸쳐 25발의 미사일과 해상 완충구역에 100여 발의 포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이중 한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낙탄 되며 공습경보가 발령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 첫 메시지를 대신해온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 주요 목표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을 통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선제 핵공격 의지를 재차 밝히며 도발을 지속하였다.<sup>1)</sup>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시기 국민들이 받아들인 안보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대응에 대한 인식은 아산정책연구원원의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설문결과에서 잘 나타나 있다. 국가 안보상황 인식에 대한 질문에 부정 인식이 2022년 11월 최초로 70%를 넘었으며,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개발에 다수의 인원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sup>2)</sup>

이와 같은 상황은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게도 중요한 과제였으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전략을 토대로 연합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sup>3)</sup> 그 산물이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함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미 워싱턴 선언에 대해 보수와 진보는 이분법적 의견으로 대립하였고, 국민들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부 형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sup>4)</sup>

이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의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억제의 성공요인인 능력, 의지전달, 신뢰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북한의 핵억제를 위해 한미가 나아가야 할 확장억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정준기, “김정은 ‘핵탄 보유 기하급수 증가’... 군 ‘핵 사용은 정권 종말’ 경고”, 『한국일보』, 2023.1.1.  
2)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3, pp.20-30.  
3)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주) 다나기획, 2023, pp.160-163.  
4) 조선일보,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한 핵 족쇄’는 강화됐다.”, 『조선일보』, 2023.4.27.

##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 1. 한미 워싱턴 선언

한미의 확장억제전략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많은 협상과 논의를 통해 발전하였고, 그 산물이 2023년 4월 26일에 발표한 ‘한미 워싱턴 선언’이다. 한미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미 워싱턴 선언 핵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모든 핵무기 사용 시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노력 약속</li><li>·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설립</li><li>· 미국의 핵 작전 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지원하며 이를 공동 기획 및 실행 가능토록 협력하며, 핵억제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 강화</li><li>· 북한의 핵 공격 시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li><li>·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li><li>· 핵 방호를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포함 정부 간 상설협의 강화</li><li>· 한국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li><li>·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와 한미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 재확인</li></ul>
-----------------------------------------------------------------------------------------------------------------------------------------------------------------------------------------------------------------------------------------------------------------------------------------------------------------------------------------------------------------------------------------------------------------------------------------------------------------------------------------------------------------------------------------------

\* 출처: 한미 워싱턴 선언 전문을 저자가 요약 정리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① 한국의 핵 작전 참여 확대, ②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 확인, ③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의 이행에 대한 재확인으로 볼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한국의 핵 작전 참여 확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통해 핵사용과 운용 시 한국과 협의하며, 미국의 핵 작전 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핵 작전 시 한국은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참여하였으나,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사용과 운용은 물론, 핵 작전 시 한국군의 참여와 이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한국의 핵 작전 참여가 확대되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 확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며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로써 핵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 강화 및 공동 기획 등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의 이행 재확인으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한미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의 한미 정부의 고민과 협의의 산물로 확장억제를 위한 가시적 조치와 향후 협의를 통해 발전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2. 확장억제전략

한국의 확장억제전략은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로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한다.<sup>5)</sup> 거부적 억제는 대응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핵무기를 사용하여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부에서는 핵 방호(nuclear protection)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sup>6)</sup> 이 또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대응하겠다는 점에서 거부적 억제로 볼 수 있다. 응징적 억제는 핵무기 공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한 핵 보복과 한국의 대량응징보복(KMPR)체계가 여기에 해당한다.<sup>7)</sup>

이러한 확장억제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억제의 성공요인인 3C(capability, communication, credibility)를 충족하여야 한다. 억제의 성공요인을 연구한 필 윌리엄스(Phil Williams)는 성공요인을 능력, 의지전달<sup>8)</sup>, 신뢰성으로 제시하였다.<sup>9)</sup> 첫 번째, 능력(capability)은 핵 보복 능력을 뜻하며, 제1격 능력(first strike capability) 이외에 제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까지 보유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을 미보유한 경우에는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까지 능력의 의미로 확대하였다. 즉 능력은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총칭한다. 두 번째, 의지전달(communication)은 억제대상자에게 억제자의 정

5) 권태영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경기: 북코리아, 2014, pp.227-229.

6) 임채무, “한국형 3축에 핵 방호 추가, 4축 체계로 전환해야”, 『국방일보』, 2022.12.14.

7) 박휘락, 『북핵위협시대 국방의 조건』, 경기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15, pp.77-80.

8) Communication은 학자의 의도에 따라 의지전달, 의사전달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지’는 사전적 의미로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여 이루겠다는 행동과 연결된 용어인 반면 ‘의사’는 단순한 생각, 적극성이 없는 중립적인 용어임을 고려할 때 핵억제에 있어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억제자의 의도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Communication을 ‘의지전달’로 사용하였다.

9) Phil Williams, "Deterrence", *Contemporary strategy: Theories and Politics*, 1975, p.75.

확하고 일관된 억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신뢰성(credibility)은 억제 대상자가 핵을 사용했을 때 반드시 더 큰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억제자의 능력과 의지전달을 억제대상자가 평가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신뢰성은 반드시 억제대상자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적 지지는 북한에게 강력한 의지전달을 통해 한국을 신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협상이론 중 퍼트남의 2단계 게임이론으로 설명된다. 즉 억제협상에 있어 억제자는 한국과 미국이며, 억제대상자는 북한이다. 북한이 한미의 억제전략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부 협상인 한국과 미국의 확장억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미국의 확장억제를 한국이 신뢰해야 한다. 여기서 신뢰의 주체는 국민이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성이 한미 억제전략에 대한 북한의 신뢰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sup>10)</sup> 결론적으로 억제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신뢰성은 북한과 더불어 국민의 신뢰성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한미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문제의식을 두고 분석하여 억제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확장억제전략과 차별화 되는 한미 워싱턴 선언의 주요 정책에 대해 억제대상인 북한의 핵억제에 어떠한 의미와 효과가 있으며,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에 대해 능력, 의지전달, 신뢰성 등 억제제의 성공요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핵 억제력 향상과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한미 워싱턴 선언의 주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Ⅲ. 한미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억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미 확장억제전략의 최신 버전인 워싱턴 선언은 일부 정치권의 우려와 같이 보여주기로 성과 없는 선언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이 강화 되었는가?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억제전략과 비교하여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알아보고, 북한의 핵억제에 어떠한 의미와 효과가 있는가를 억제제의 성공요인인 능력, 의지전달, 신뢰성 측

10)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전면개정 7판)』, 서울: 박영사, 2019, pp.49-59.

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1. 능력

억제의 성공요인 중에서 능력(capability)은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힘(power)을 과시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능력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와 같은 가시적 조치와 미국의 핵 작전 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동 기획과 실행의 협력, 연합 교육 및 훈련 등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미 핵억제 능력을 향상시켰다.

첫 번째, 전략핵잠수함의 정례적 입항이 갖는 의미와 효과이다. 한미 워싱턴 선언 중에는 이례적으로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명시된 전략핵잠수함의 의미와 효과는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핵무기의 일시적인 한반도 배치 효과이다. 미국의 핵 3축은 지상기반 핵전력, 해상기반 핵전력, 공중기반 핵전력이다. 이 중 해상기반 핵전력은 타 기반 핵전력과 비교하여 생존성이 우수하고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어 미국 핵억제의 주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상기반 핵전력은 발사 후 공격대상까지의 거리로 인해 요격과 대피 등 대응이 가능하고, 공중기반 핵전력은 무기 탑재, 이동, 방공망 등에 의해 생존성과 이동시간 소요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전략핵잠수함은 항상 핵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공해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억제대상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타 기반 핵전력보다 해상기반 핵전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기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 척의 전략핵잠수함의 핵전력은 무기위력 90kt 급 W76-1 핵탄두와 무기위력 455kt 급 W88 핵탄두가 탑재된 Trident-II SLBM 20여 발과 저위력 핵무기인 W76-2 핵탄두 수 발이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1)</sup> 전략핵잠수함 한 척의 핵탄두 수와 무기위력이 한 국가의 핵능력과 유사하거나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핵전력이 한반도에 기항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핵 보복 능력이 한시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고, 북한에게는 공해상 어딘가에 해상기반 핵전력이 있을 수 있다는 모호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 US DOD, *Nuclear Matters Hand Book 2020*, Washington D. C. 2020, pp.34-36.

둘째, 전략핵잠수함에는 사용 가능한 W76-2 핵탄두가 장착된 SLBM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sup>12)</sup> W76-2 핵탄두는 2022년 핵태세보고서(NPR)에서 핵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는 저위력 핵무기이다.<sup>13)</sup> 저위력 핵무기가 중요한 것은 약 5~7kt의 무기위력으로 대량살상이 아닌 중요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전술핵무기로 평가받기 때문이다.<sup>14)</sup> 즉 저위력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기항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 또는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 또는 도발 시 미국이 핵사용 문턱이 낮은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저위력 핵무기로 인해 북 도발에 대한 응징적 핵억제 능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전략핵잠수함과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기항은 새로운 행태의 핵 공유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핵억제의 기본은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등에 얽매어 있는 상황에서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국제적 환경이 용인하지 않는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외교적인 고립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들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감당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인 핵 공유와 핵 재배치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핵 재배치는 가능한가? 주한 미군의 핵무기 재배치는 결국 또 다른 핵확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것으로, 굳이 재배치하여 정치,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기 보다는 실질적인 핵 억제력 강화 방법을 추구할 것이다. 결국 가능한 방법은 핵 공유이다. 핵 공유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영국식 해상기반 핵 공유와 독일식 공중기반 핵 공유 등 공유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조비연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표 2>와 같이 다양한 핵 공유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 중에서 해상기반 핵 공유는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한미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공동 운영하는 방법이다.<sup>15)</sup> 이는 은닉성과 생존성이 우수하면서도 낮은 정치적 부담이 장점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전략핵잠수함의 위치와 접근

12) W76-2 핵탄두는 100kt 위력의 W76 수소탄에서 2차 핵융합 단계의 부속을 제거하여 1단계 핵분열만 사용토록 개조한 핵탄두로 약 5~7kt의 핵탄두이다.

13) US DoD, *2022 Nuclear Posture Review*, Washington D.C., 2022.

14) 조비연,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전략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1, pp. 40-55.

15) 박휘락,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정책 방향”, 2022년도 정례 융합안보 세미나 자료, 2022.11.17, pp.71-74.

성을 고려 독일과 영국 방식의 혼재형을 유의미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sup>16)</sup>

〈표 2〉 한국형 핵공유체제(안) 비교 요약

주요 검토요소		KRINS모델 (독일식)	해상기반 (박휘락)	독일식·영국식 혼재형	
				한국주도	미국주도
공유 체제	탄두	美	美	美	美
	투발수단	韓 전투기	美 SLBM	韓 SLBM	美 SLBM
	운반 플랫폼	-	美 핵잠수함	韓 핵잠수함	韓 핵잠수함

\* 출처: 조비연, 『영국식·독일식 핵 공유 체제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시사점』,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2, p.42. 〈표 IV-1〉 한국형 핵공유체제(안) 비교 인용

그러나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제시한 전략핵잠수함의 정례적 한반도 기항과 모든 핵무기 사용 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 약속은 낮은 단계의 해상기반 핵 공유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핵 공유체제로 보기에 한국의 역할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국의 역할을 증대해 나간다면 해상기반 핵 공유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한미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 상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기반 핵 공유체제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미국의 핵 작전 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동 기획과 실행의 협력, 연합 교육 및 훈련 등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핵 작전 참여의 의미와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핵 작전 참여 확대로 한국군의 핵 작전수행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한 차례 핵개발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전례가 있고, 단기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한 국가로써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확산 우려 국가로 보았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발언은 미국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아마도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와 한미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한다.’라는 한국의 비확산 항목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에게 한국은 비확산 대상 국가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핵 작전은 미군 주도로 수행하여 왔다. 한국군은 핵 작전 훈련 시 한국군

16) 조비연, 『영국식·독일식 핵 공유 체제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시사점』,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2, pp.43-46.



의 참가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앞으로는 핵 작전 시 한국군 재래식전력의 참여와 한미 연합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것은 핵확산 우려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되었고, 또한 한국군의 위상과 작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인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핵 작전 참여 확대를 통해 핵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한미 연합군은 핵 작전 시 통합억제를 위해 한미 연합군 간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미 워싱턴 선언은 통합억제를 위해 핵 작전 시 미군은 핵전력을 주도하고, 한국군은 재래식전력을 지원하는 역할로 명시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군은 응징적 억제를 중심으로 핵 운용을 담당하고, 한국군은 거부적 억제전략의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극복하고 대응하는 재래식전력을 담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2022 핵태세보고서(2022 NPR)에서 밝힌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을 통합하는 통합억제전략과도 일치한다.<sup>17)</sup>

통합억제전략을 위한 한국의 재래식전력은 북한의 핵공격 시 핵 방호를 통해 지휘통제 체계와 전투력을 보존하고, 이 후에 반격을 통해 북한군의 재래식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핵 방호 능력은 북한에게 핵 공격으로도 그들의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명확한 억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즉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는 통합억제를 위한 재래식전력, 즉 한국군의 핵 방호 능력과 핵 작전 지원에 필요한 기획 및 협조, 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하여 한미의 핵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이 핵 작전 수행에 필요한 핵 방호 능력을 갖추고 실전적인 한미 연합 핵 작전 훈련으로 거부적 억제능력을 갖출 것을 제시하고 있다.

## 2. 의지전달

의지전달(communication)은 억제자의 정확하고 일관된 의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한미 워싱턴 선언은 그 자체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경고의 선언적 의미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워싱턴 선언의 의지전달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두 정상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의 합의에 의한 핵억제 의지로 어느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특히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

17) US DoD, 2022 Nuclear Posture Review, Washington D.C., 2022.

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경고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 의지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며, 강력한 의지를 반복해서 표명하였다.

둘째, 미국은 핵협의그룹 설립 등 이례적인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에 담았다. 핵협의그룹(NCG)의 설립, 미국의 핵 작전 시 한국의 재래식전략의 참여,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과 기획 활동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협력 등 한미 워싱턴 선언에는 그 동안 미국이 동맹국이면서 핵 운용과 핵시설 접근에 대해서만큼은 장벽이 막혀 있었으나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일부 벽을 허물고 한국의 진입을 허용하였다. 특히, 현재 운용 중인 각종 협의체는 개념적인 확장억제와 핵 방호에 치우쳐 있었으나 이번에 제시된 핵협의그룹(NCG)은 핵 운용과 관련되어 한국 정부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조치는 북한의 핵위협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로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의지전달에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미 정상 의지를 워싱턴 선언으로 명문화하였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마다 한미 정상회담은 반복해서 개최되었고 회담마다 공동성명이 발표되지만 이번과 같이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채택한 것은 유일 할 것이다. 이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파괴하기 어려우며 과거에 비해 구속력 있는 의지가 지속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한미 워싱턴 선언의 의지전달 효과는 북한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첫 반응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대변해 온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나왔다.<sup>18)</sup> 김여정의 담화는 한미 워싱턴 선언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되었다. 담화문에서 눈여겨 볼 것은 원색적인 비난 중에도 몇 가지 의미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다. 담화문 중 ‘선택과 행동 의지를 명문화’하였고, ‘적대 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는 표현에서 북한은 한미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부의 공식적 의지임을 인식하였고, ‘정권종말’, ‘더 많은 핵전략자산들을 전개’ 등의 표현을 통해 자신들에게 강력한 경고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에게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미 워싱턴 선언은 앞서 밝혔듯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미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

18) 김치관, “김여정, ‘워싱턴선언’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 『통일뉴스』, 2023.4.29.

하고 있다. 북한의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공식적 반응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워싱턴 선언 이후 북한의 도발이 한동안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북한의 주 도발 형태인 미사일발사 도발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2023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현황

일자	도발 내용	일자	도발 내용
1. 1.	단거리탄도미사일(KN-25) 1발	3. 22.	순항미사일(화살-1, 2) 3발
2. 18.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5) 1발	3. 25.~27.	수중 드론(해일) 1발
2. 20.	단거리탄도미사일(KN-25) 2발	3. 27.	단거리탄도미사일(KN-23) 2발
2. 23.	순항미사일(화살-2) 4발	4. 4.~7.	수중 드론(해일-2) 1발
3. 9.	근거리탄도미사일(전술유도탄) 6발	4. 13.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8) 1발
3. 12.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BM) 2발	5. 31.	우주발사체 천리마-1호 발사
3. 14.	단거리탄도미사일(KN-23) 2발	6. 15.	단거리탄도미사일(KN-23) 2발
3. 16.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7) 1발	7. 12.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8) 1발
3. 19.	단거리탄도미사일(KN-23) 1발	7. 19.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3. 21.~23.	수중 드론(해일) 1발	7. 22.	순항미사일 수발(분석 중)

\* 출처: 저자 요약 정리

한미 워싱턴 선언 이전에는 열다섯 차례에 걸쳐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수중 드론 등 다양한 미사일발사 도발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 이후에는 도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한미 공동의 강력한 의지전달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일부 재개된 미사일발사 도발은 한미 연합 훈련과 전략핵잠수함 입항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북한의 단순 대응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

위 도발 사례와 같이 한미 워싱턴 선언은 북한에게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단순히 강력한 의지와 전례 없던 조치, 명문화로만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과거에도 강력한 의지는 자주 전달되었다. 부시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핵실험으로 되돌아왔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의지전달은 효과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아니며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요인 중 한 가지는 과거 한미 정부의 성향에 따른 도발의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중요 도발을 역대 한미 정부의 성향과 연계하여 분석하면 <표 4>와 같이 한

가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모두 핵억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경우 북한은 핵실험과 같은 중대 도발은 하지 않았다.<sup>19)</sup>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유화책 정부인 경우에는 중대 도발을 포함한 다양한 도발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미국 정부의 성향이 유화책인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한미 정부의 성향에 따른 북한의 도발 현황

: 강경책     : 유화책

한국(임기 5년)	연 도	주요 이슈	미국(재선 시 8년)
김영삼	1993	-	빌 클린턴
김대중	1998	-	
	2001	-	조지 W. 부시
노무현	2003	1차 핵실험(2006)	
	2008		버락 오바마
이명박	2009	2차 핵실험(2009)	
박근혜	2013	3, 4, 5차 핵실험(2013, 2016)	도널드 트럼프
	2017	6차 핵실험(2017)	
문재인	2021	-	조 바이든

\* 출처: 박용우, “북핵 억제제를 위한 삼위일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의지전달 요인을 중심으로)”, 조선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p.55.

즉, 한미 워싱턴 선언의 강력한 의지는 한미 정상의 일치된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강력하게 북한 정권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지전달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의지여야 한다. 최근에 다시 시작된 도발은 워싱턴 선언의 실행과 그 위기감의 증대, 그들의 하계군사훈련과 맞물려 한미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일 것이다. 따라서 한미는 워싱턴 선언에 대한 공동의 확장억제 의지를 전달하며, 일괄성 있게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다.

19)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도발, DMZ 지뢰 도발, 무인기 도발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질러왔다. 이러한 도발 중 핵실험만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모두 일관되게 중대 도발로 인정하고 있으며, 도발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치·군사적 판단이 아닌 북한 최고 지도자의 정세판단과 한미 정부의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심해야 가능하다. 이에 한미 정부의 성향에 따른 북한의 도발을 핵실험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 3. 신뢰성

신뢰성(credibility)은 억제 대상자가 핵을 사용 했을 때 반드시 더 큰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한미 워싱턴 선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이 한미 워싱턴 선언의 능력과 의지전달을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와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확장억제력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는가?’ 하는 동맹보장의 신뢰성 문제이다.<sup>20)</sup>

먼저 한미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북한의 신뢰성이다. 결론부터 본다면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한미 워싱턴 선언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의지전달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반응은 김여정 부부장의 원색적 비난과 그들의 미사일 도발 현황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 워싱턴 선언만으로 핵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충분히 제고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신뢰성은 단편적인 선언, 행동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반복된 의지전달과 능력을 통해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 한미 핵억제의 일관성은 부족하였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 또는 공화당으로 바뀔 때,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핵억제 의지는 급변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성향의 정부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북한에게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 자신들의 태도와 입장에 맞는 정권을 이용하도록 학습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습결과는 핵억제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그들은 항상 한미 정부의 의지가 강할 때는 협상을 단절하고 강대강의 대결을 추구하며 비핵화 낙관론자들을 기다렸다. 낙관론자들에게는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며, 협상을 가장하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면 뒤에서 핵을 개발하고, 실험하며 줄타기를 하여 왔다.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이러한 패턴의 행동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김여정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 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운, 미래가 없는 늙은이’라 칭하고 있다. 이 표현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많아 노망이 났다고 비아냥거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남은 임기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대통령이 교체되면 핵억제의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과 동맹이 굳건한 현 시기를 피해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뢰성은 향후 한미가 어떠한 메시지를

20) 이상규, “확장억제와 동맹보장의 구분 및 강화방안”,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23.2.10, pp.2-8.

주느냐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란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성이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의심하는 국민에게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동맹과 우방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이 ‘미국의 비확산 목표달성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의한 조치였다.<sup>21)</sup>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한미 워싱턴 선언의 주요 조치들이 그들의 요구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실망하였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동맹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2)</sup>.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국민들의 여론과 반응을 볼 때 한미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한국 국민들의 핵무장 여론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적으로 핵무장과 핵 재배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미 워싱턴 선언문을 이끌어 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북한의 핵위협 증대로 인해 핵무장 또는 핵 재배치를 원하는 여론이 최고점을 갱신한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보다는 향후 방향성 위주로 제시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 핵위협의 정도,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사실상 핵 공유다”라는 보도와 미국 행정부의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발표로 상반된 한미 정부 간 의견의 엇박자는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sup>23)</sup> 이는 사전에 한미의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조율되었다면 이와 같이 신뢰성을 반감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은 여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미 워싱턴 선언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 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 중 외교가

21) US DoD, *JP 3-72 Nuclear Operations*, Washington D. C., 2019.

22) Ankit Panda,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Software Upgrade for the U.S.-South Korea Alliance”, CEIP, 2023.5.1.

23) 최경영, “김동연,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찍기, 경제는 걱정’”, 『KBS』, 2023.5.2.

35%인 반면,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동일한 외교가 32%를 차지하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미국 방문의 성과에 대해서도 매우 도움 21%, 약간 도움 22%로 긍정 평가가 43%였으며, 부정평가로는 전혀 도움 안 된다는 의견이 25%, 별로 도움 안 된다는 의견이 17%로 부정평가가 42%로 평가가 엇갈렸다.<sup>24)</sup> 이 설문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한미 워싱턴 선언이 한국 국민들에게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충분하게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조치와 노력들이 한국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에게는 기대만큼의 만족을 주지 못하였으며, 진보성향의 국민들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강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한미 워싱턴 선언은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비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미국 전문가들의 부정적 견해들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 선언문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였다. 이는 미 행정부가 한국 윤석열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 확장억제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추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배경에 대한 우려가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미국의 추가 조치들이 한국 국민들의 핵보유 여론과 윤석열 정부의 자체 핵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동맹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차후에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할 때마다 한국의 요구가 다시 되돌아오는 동맹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 행정부에 부정적 의견과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sup>25)</sup>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폐기 주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sup>26)</sup> 이러한 미국 내에서의 부정적 의견들은 향후 한미 워싱턴 선언의 발전에 부정적 요인이며, 나아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미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억제에 미치는 효과를 능력, 의지전달, 신뢰성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능력 측면에서는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을 포함한 핵전력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는 핵무기의 일시적인 한반도 배치 효과와 전략핵잠수함에 탑재된 저위력 핵무기를 통해

24) 박상기, “윤 지지율 3%p 오른 33%...여, 7주 만에 민주당에 앞서”, 『조선일보』, 2023.5.5.

25) Ankit Panda, op.cit., 2023.

26) Baker, P. and Sanger, D. E. (2023.4.26). “In Turn to Deterrence, Biden Vows ‘End’ of North Korean Regime if It Attacks.” The New York Times.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응징적 억제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가시적 핵전력 운용은 새로운 형태의 해상기반 핵 공유체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핵 작전의 한국 참여 확대는 한국군의 핵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한미 통합억제를 위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한국군의 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의지전달 측면에서 한미 워싱턴 선언의 의미는 한미 두 정상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라는 점과 핵협의그룹 설립 등 이례적인 강력한 의지가 명문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 정부가 공동의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단기적인 신뢰성은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 측면에서의 일관성 있는 신뢰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또한 한국 국민의 높아진 안보의식을 워싱턴 선언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학자들의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는 등 신뢰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발전이 요구되었다.

#### IV. 한미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제고 발전방향

지금까지 한미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억제에 미치는 효과와 함의를 억제의 성공요인인 능력, 의지전달, 신뢰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미 워싱턴 선언은 미래 선언적이며, 방향성을 중심으로 발표되었고, 앞으로 한미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한미 워싱턴 선언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능력

능력 측면에서 한미 워싱턴 선언의 발전방향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략 핵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해상기반 핵 공유체계’로의 발전 가능성이며, 다음은 통합억제를 위한 핵 방호 능력과 핵 작전 능력 향상이다. 이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응징적, 거부적 억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첫째, 해상기반 핵 공유체계로 발전이다. 해상기반 핵 공유체계는 핵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잠수함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은 핵 공유체계의 3가지 기반 중 어느 한 가지도 갖추고 있지 않다. 현재로써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탑재된 미



사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가지 기반 중 핵탄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인해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의 경우 협상과 개발 진행에 따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핵 공유체계 추진 초기에는 일부 학자들이 제안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 공해상에서 운용하며, 그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다음 단계로 한국의 핵잠수함에 미 핵탄두가 장착된 SLBM 운용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과 SLBM에 미국의 핵탄두를 운용하는 형태로 단계별 기반체계의 공유를 확대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반체계 확대와 더불어 핵사용, 기획, 운용에 대해 한국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핵을 미 보유한 독일과 핵 공유 시 핵무기 사용 권한은 미국이 갖고, 핵 사용을 위한 기획과 운용 시 독일이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을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다. 다만 기획과 운용에 대한 참여 정도는 기반체계의 단계별 확대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핵사용 기획과 운용에 대한 한미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합의하였으며, 최초 회의가 7월 18일에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핵 공유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핵협의그룹의 조속한 정착과 이를 통해 핵 기획과 운용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해상기반 핵 공유체계는 시발점에서 있다. 전략핵잠수함의 정례적인 한반도 기항과 핵협의그룹의 설립이 그 출발선인 것이다. 향후 핵 기반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핵 공유체계 향상을 단계화 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핵공유체계 단계화 모델을 <표 5>와 같이 제시한다.

<표 5> 한국형 핵공유체계 단계화 모델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공유 체계	탄두	美 핵탄두	美 핵탄두	美 핵탄두
	투발수단	美 SLBM	美 SLBM	韓 SLBM
	운반 플랫폼	美 핵잠수함	韓 핵잠수함	韓 핵잠수함
핵 공유도	권한	美	美	美
	기획	韓 참여	韓 참여	韓 주도
	운용	韓 참여	韓 주도	韓 주도

\* 출처: 저자 작성

둘째, 통합억제를 위한 핵 방호 능력 향상과 핵 작전 능력 향상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미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에는 통합억제의 방향과 노력들이 제시되었다. 통합억제를 위해 한국군은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지휘통제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전투력을 보존하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핵 방호 능력이 확보되었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핵 사용에 대한 억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통합억제를 위한 핵 방호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아가야 하겠다.

핵 방호 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군은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에 핵 방호를 추가하여 4축체계(3K+1P)로 발전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형 3축체계에 의한 핵 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더불어 현존 전력의 핵 방호 능력을 추가하여 핵 공격 시에도 생존하고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핵 방호 능력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추진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전투발전 8대 요소별로 <표 6>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계속 발전시켜야 하겠다.

<표 6> 전투발전 8대 요소별 핵 방호 능력 발전시킬 사항

분 야	발전시킬 사항
교리	· 핵전 방호 교리정립 · 방사능오염지역 작전교리 발전
구조	· Army TIGER 부대개편 조기 추진 · 화생방부대 편성 보강
훈련	· 전술제대 핵전 방호 교육훈련 및 전술훈련 강화 · 작전사급 이상 핵전 방호훈련 정례화
장비	· 주요 장비의 고준위 방사선과 EMP 방호 기능 추가 · 방사능방호복, 방사능측정기 등 방사능작전 장비·물자 확보 · 핵전 방호 의약품(방사능방호약품 및 치료제) 확보
리더십	· 핵전 실상 이해를 통해 핵전 방호 자신감 강화
인원	· 핵 병과 창설, 핵 전문가 사단급 이상부대 편성
시설	· 핵전 방호시설(화생방집단보호시설, 지하 대피호 등) 확보 ·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설 확충
정책	· 핵전 방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발전

\* 출처: 저자 작성

최종적으로 구비된 핵 방호 능력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통합억제 실행력을 완성시켜야 한다. 더불어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의 핵 방호를 위한 핵 민방위체계도 병행하여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sup>27)</sup>

## 2. 의지전달

의지전달 측면에서 한미 워싱턴 선언은 양국의 공통된 의지를 명문화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전달하였고, 그 효과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도발 감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강한 의지전달만으로 달성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과거 한미 정부는 강력한 의지전달을 하였어도 두 정부 간의 의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즉 한미 양국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상설협의체를 연계시킴으로써 한미 정부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모아야 하겠다. 이를 위해 핵협의그룹은 공통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없으며, 확장억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긍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8일 개최된 핵협의그룹 출범회의는 차관보급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업무체계 등 실무위주로 논의되었으며, 향후에 고위급 회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sup>28)</sup> 즉 핵협의그룹의 위상은 차관보급으로 시작하였으나 주제와 성격에 따라 차관급 또는 그 이상 고위급 협의체로 상향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 진다. 확장억제는 외교뿐만 아니라 정치·군사·경제·사회 문제와도 연계된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협의체와 같이 고정된 ‘급’과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필요시 주제와 성격에 따라 언제든지 만나 협의할 수 있고 사안별 가장 적합한 인원을 선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며, 의사소통이 활성화된 협의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의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국의 의사소통을 강화시키고 하나의 의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장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자리에서 “양국 정상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를 바란다.”<sup>29)</sup>라고 언급하였듯이 핵협의그룹

27) 박재완, “국가 핵방호체계 발전방안”, 『2022 KIMA 정책연구』, 2022.9.

28) 대통령실 보도자료,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 발표문”, 『대통령실』, 2023.7.18.

29) 대통령실 브리핑, “尹 대통령 ‘NCG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높아...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 당부’”, 『대통령실』, 2023.7.18.

은 양국 정상의 의지를 담은 협의체이며,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양국 정부의 확장억제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기존의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해 지침과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핵협의그룹을 중심으로 한미 정상의 두 의지가 하나의 의지로 통합되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핵협의그룹은 고정된 틀보다는 주제와 분야를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구성 및 협의되어, 확장억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미 두 정상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든다면 효과적인 의지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에 핵 관련 전문가 상설 운용이 필요하다.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 ‘핵 공유이다, 핵 공유가 아니다’라는 상반된 발표와 인터뷰로 인해 선언의 신뢰성이 훼손되었고 의지전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한미 정부는 주요 의사결정과 의지전달 시에 정부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된 의지를 발표해야 한다. 워싱턴 선언문 발표 당시에도 이러한 소통과 협의 채널이 운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사례와 같은 일이 왜 발생하였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핵억제와 핵 공유에 대한 전문가의 부재로 찾아 볼 수 있다. 한미 워싱턴 선언이 능력 측면에서 핵 공유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시발점이란 핵 공유로 갈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아직은 핵 공유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핵억제와 핵 공유 관련 전문가를 대부분 자문위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간 협상과 그 발표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자문위원의 자문을 그때마다 받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결론적으로 자문위원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실에 핵억제와 핵 공유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확보된 전문가는 한미 간의 협상과 조율된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 담화문, 연설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한미의 일관된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언함으로써 한미 간의 동일한 의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확보된 전문가는 대통령실에서 핵억제와 핵 공유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며, 주기적으로 학계와 연계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 정부 간 일치된 의지전달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확하고, 공동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간 상설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정부 내 핵억제와 핵 공유 전문가 운용을 통해 정부와 학계가 연계된 연구와 정책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신뢰성

한미 워싱턴 선언은 신뢰성 측면에서 북한에게 단기적으로 신뢰성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거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의지전달로 신뢰성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으며, 핵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성은 높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일관성 있는 정책과 의지전달을 통해 북한에게 핵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주어야 한다. 한미 정권이 교체될 경우 새로운 정권은 자신의 의지를 담기 위해 확장억제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일관성 있는 억제 전략과 이를 통한 의지전달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 정권 교체 때마다 핵억제와 비핵화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었는가에 따라 의지의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핵억제와 비핵화는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두 가지의 가치를 추진하면서 일관성 있는 의지전달을 위해 핵억제와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두 트랙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sup>30)</sup> 다만 정권이 교체 시 문제되었던 핵억제와 비핵화의 가중치 문제는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무기가 실질적 군사적 위협임이 분명해졌다는 점과, 북한의 공격적인 핵 독트린 발표 등 그 위협을 고려할 때 핵억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핵억제를 기준으로 필요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겠다.

둘째, 국민들에게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제시되었던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로는 먼저 6월 16일 미 핵추진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sup>31)</sup> 7월 18일에는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40여 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이는 모두 한미 워싱턴 선언의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의 이행차원이었다.<sup>32)</sup> 또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인 확장억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가 7월 18일 개최되었다.<sup>33)</sup> 이와

30) 박용우, “북핵 억제를 위한 삼위일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의지전달 요인을 중심으로)”,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22, pp.77-78.

31) 국방부 보도자료, “미국 오하이오급핵추진 잠수함(SSGN) 부산작전기지 입항”, 『국방부』, 2023.6.16.

32) 국방부 보도자료,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부산작전기지 입항”, 『국방부』, 2023.7.18.

33) 대통령실 브리핑, “윤 대통령 ‘NCG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높아...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 당부”, 『대통령실』, 2023.7.18.

같이 한미 워싱턴 선언의 조치들이 하나씩 실행되면서 워싱턴 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상승할 것이며, 이는 한미 확장억제전략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행과 일관성 있는 조치들이 반복되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뢰성을 위한 다음 노력으로 확장억제에 대한 가용범위내 정보공개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신뢰성 회복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미 워싱턴 선언의 주요 조치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략핵잠수함과 핵협의그룹을 ‘핵 공유이다. 아니다.’라는 설전과 창설 예정인 한국의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과 기획 활동 연계를 두고 미국이 한국형 3축체계를 담당하는 전략사령부를 통제하려는 우려가 있다는 인식 등이 있다.<sup>34)</sup>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과 연계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검토해야 한다. 물론 정보제공에 있어 한미 간 사전 조율을 통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선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사소한 오해는 결국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 워싱턴 선언과 연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능력 측면에서는 해상기반 핵 공유체계로의 발전과 핵 방호 능력 향상이 요구되었으며, 의지전달 측면에서는 한미 공동의 의지전달을 위해 상설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정부에 핵억제와 핵 공유 전문가의 상설 운영이 요구되었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일관성 있는 핵억제 정책추진을 위해 핵억제와 비핵화 두 트랙 추진방안과 국민의 확장억제 신뢰성 회복을 위한 실행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 V. 결론

북한은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 김여정의 원론적 수준의 비난 반응 이후 규탄집회 또는 언론 비난 수위를 과거에 비해 극도로 조절하며, 한미를 탐색하고 있으며, 최근에 다시 도발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의 북한 정권의 행태를 보면 2024년 이후 새로운 미국 대선과 한국의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며, 미국의 정권 교체

34) 이철재, “워싱턴 선언의 숨은 대가, 내년 창설 전략사령부에 대한 견제”, 『중앙일보』, 2023.7.13.

시기에 다양한 도발 또는 대화 등을 통해 한미 정부의 핵억제 의지와 성향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정부는 이러한 시기를 대비하여 워싱턴 선언을 발전시켜 한미 확장억제전략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능력 면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SLBM 개발 등의 노력과 한미 간 협상을 통해 해상기반 핵 공유체제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3K)에 핵 방호(protection)를 추가한 4축 체계(3K+1P)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의지전달 면에서는 두 국가가 동일하고 일관된 의지를 전달할 때 그 효과가 있음을 주지하고 한미가 상설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의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의지전달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면 북한에게 충분한 신뢰성을 줄 것이며,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확장억제를 인식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어렵다. 이는 정부, 군대, 국민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확장억제전략의 발전을 위해 모든 요소들이 참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완비된 확장억제전략은 한미 정부의 일치된 의지전달과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통합억제력을 발휘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이는 오로지 한미의 확장억제전략의 능력과 의지전달, 신뢰성이 바탕이 된 실효성 제고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주) 다나기획, 2023.
- 권태영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경기: 북코리아, 2014.
- 박휘락, 『북핵위협시대 국방의 조건』, 경기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5.
-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전면개정 7판)』, 서울: 박영사, 2019.
- 조비연,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전략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1.
- \_\_\_\_\_, 『영국식·독일식 핵 공유 체제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시사점』,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2.
- 박용우, “북핵 억제를 위한 삼위일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의지전달 요인을 중심으로)”, 조선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박정법, “억제이론으로 본 대남도발 억제 실패요인 분석: 최고 통수권자 대상 도발사례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39집, 2015.
- 박재완,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국가 핵 방호체계 발전방안 연구”, 『북핵 위협 대비 핵안보 프레임을 다시 짜다.』, 서울: 한국융합안보연구원, 2022.
- \_\_\_\_\_, “국가 핵방호체계 발전방안”, 『2022 KIMA 정책연구』, 2022.

- 박희락,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보정책 방향”, 2022년도 정례 융합안보 세미나 자료, 2022.11.17.
- 이상규, “확장억제와 동맹보장의 구분 및 강화방안”,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23.
-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3.
- 차두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위협과 대응의 시급성”, Issue Brief 2021-32.
- US DoD, *2022 Nuclear Posture Review*, Washington D.C. 2022.
- \_\_\_\_\_, *Nuclear Matters HandBook 2020*, Washington D.C. 2020.
- \_\_\_\_\_, *JP 3-72 Nuclear Operations*, Washington D.C. 2019.
- Ankit Panda,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Software Upgrade for the U.S.–South Korea Alliance”, CEIP, 2023.5.1.
- Baker, P. and Sanger, D. E. (2023. 4. 26.). “In Turn to Deterrence, Biden Vows ‘End’ of North Korean Regime if It Attacks.” The New York Times.
- Phil Williams, “Deterrence”, *Contemporary strategy: Theories and Politics*. 1975.
- 국방부 보도자료,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SSGN) 부산작전기지 입항”, 『국방부』, 2023.6.16.
- \_\_\_\_\_,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부산작전기지 입항”, 『국방부』, 2023. 7.18.
- 김치관, “김여정, ‘워싱턴선언’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 『통일뉴스』, 2023.4.29.
- 대통령실 보도자료,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 발표문”, 『대통령실』, 2023.7.18.
- 대통령실 브리핑, “윤 대통령 ‘NCG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높아…북핵·미사일 위협에 반틈없이 대응’ 당부”, 『대통령실』, 2023.7.18.
- 박상기, “윤 지지율 3%p 오른 33%...여, 7주 만에 민주당에 앞서”, 『조선일보』, 2023.5.5.
- 이철재, “워싱턴 선언의 숨은 대가, 내년 창설 전략사령부에 대한 견제”, 『중앙일보』, 2023.7.13.
- 임채무, “한국형 3축에 핵 방호 추가, 4축 체계로 전환해야”, 『국방일보』, 2022.12.14.
- 최경영, “김동연,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찍기, 경제는 걱정’”, 『KBS』, 2023.5.2.
- 정준기, “김정은 ‘핵탄 보유 기하급수 증가’...군 ‘핵 사용은 정권 종말’ 경고”, 『한국일보』, 2023.1.1.
- 조선일보,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한 핵 족쇄’는 강화됐다.”, 『조선일보』, 2023.4.27.



【 Abstract 】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ROK-U.S. Washington Declaration

Kim Beob Heon · Park Yong Wo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increasing and the nuclear threshold is lowering through North Korea's Nuclear Forces Policy Laws like an Offensive Nuclear Doctrine and Increased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Massive Missile Launches. Accordingly, the leaders of the ROK and the U.S. adopted the Washington Declaration of the ROK-US Joint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hrough the Washington Declaration, it was announced that North Korea would provide further enhanced extended deterrence with all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asse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and the regular deployment of cutting-edge strategic assets. However, in the eyes of the public, the effectiveness of extended deterrence is not high.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hrough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It presents a direction for development. To do this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in terms of suppression success factors based on literature studies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f all, In terms of capabilities, based on strategic nuclear submarines, we will strengthen our own capabilities such as the sea-based nuclear sharing system and Korea's nuclear protection. Secondly In terms of delivery of will, strong responses and measures are required due to the permanent operation of nuclear consultation groups and nuclear experts. Lastly In terms of reliability, the government was required to pursue consistent policies such as nuclear deterrence and denuclearization.

**Key Words**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Washington Declaration, Capability, Communication, Credibility

---

• 논문투고일 : 2023년 7월 27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3년 8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8월 14일

